공정위, 납품단가 깎기 한번만 해도 '공공입찰 퇴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자·기계 등 전속거래 실태조사
기술자료 유용·유출 검찰 고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전자·기계·운송 등 41개 업종에 대해 전속거래 서면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아울러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기술자료를 유용·유출한 혐의로 한 차례만 검찰에 고발되면 공공입찰 시장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17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 내용을 설명하고, 추가 법 개정 방향성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전체거래 중 전속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하도급업체의 전속거래 강요행위 경험여부 등을 조사할 것"이라며 "그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거래구조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는 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과 유통 갑질 근절 대책,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방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대책을 내놨다. 전속거래 실태에 대해 공시대상기업집단(5조원 이상) 소속회사(1980개사)의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서면조사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 거래에 고착화해 있는 원·수급사업자 간의 힘의 불균형을 해소해 중소기업이 '일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추가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거래 현장에 안착해 중소기업이 거래 관행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중소기업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추가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개정 하도급법에 맞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먼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해 단 한 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유용·보복행위·계약서면 미교부 등 법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기본금액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주어야 하는 서면에 기술자료 사용기한과 기술자료 반환 또는 폐기 방법을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오는 10월까지 완료하겠다"며 "법률 개정 사항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美 관세 위협에 노조파업 예고까지…

車·조선업계 '엎친데 덮친 격' 시름 깊다

현대차 노조, 추가파업 논의 계획
영업적자 현대重도 19일 파업 예고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현대기아차 건물 앞 도로가 공사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총파업 행진의 영향으로 정체를 빚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판매부진과 수주 물량 부족으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내 자동차 산업과 조선산업이 노조 파업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매년 파업을 벌였던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조가 추가 파업을 준비하고 있어 경영 환경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수조원의 국민 혈세로 파산을 면한 대우조선해양도 파업에 돌입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관세 위협과 판매 부진 등 어려운 대내외 경영 환경에 처한 현대차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지난 12일과 13일 부분파업을 진행한 현대차 노조는 이번주 협상에 집중하면서도 교섭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18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추가 파업 여부를 논의할 계획을 세웠다. 이 때문에 현대차 노사가 여름휴가 전 임금협상을 타결할 수 있을지 여부에 업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아직 노사 간 임금과 성과급 인상, 주간연속 2교대 등에 대한 의견 차이가 해소되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노조는 우선 기본급 대비 5.3%인 11만6276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회사에 요구하고 있다. 조건없는 정년 60세 적용,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등도 요구안에 포함했다. 반면 사측은 기본급 3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200%+100만원 지급 등을 제시해 입장 차이가 큰 상태다.

국내 조선사 '빅3'도 비슷한 상황이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이 경영정상화를 위한 속도전에 고삐를 당기고 있지만 노조의 파업에 발목잡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회사가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파업 일정을 공개하고 회사를 압박하고 있다. 금융정보회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1분기 1238억원 영업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2분기 역시 876억원 규모의 영업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노조 중앙쟁대위는 19일 오후 2시부터 24일 오후 5시까지 전 조합원 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7월 말로 예정된 여름 휴가 전 교섭을 마무리하기 위해 다음 주까지 한계점으로 보고 파업 일정을 정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일단 파업과 함께 교섭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19일 파업출정식을 열고, 각 지단별(사업부별) 순회 철야 농성도 벌인다.

노조는 기본급 14만6746원(호봉승급분별도) 인상, 성과금 최소 250% 보장 등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기본급 동결 등의 개정안을 노조에 제안한 상황이다. 특히 다음 달로 예고된 해양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유휴인력 문제를 놓고도 노사가 대립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도 지난 13일 파업에 들어갔다. 이 회사 노조는 기본급 4.1% 이상을 요구했으나 대우조선해양은 임금 10% 반납, 상여금 분할지급 방안을 제시하는 등 노사 입장차가 컸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5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무려 13조7000억 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회사를 운영 중이다.

/양성운 기자 ysw@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어렵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존중
대선 공약 못지키게 된것 사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대선 당시 했던 약속이 사실상 물건너 간 것에 대해 사과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서 지난 14일 사용자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올린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수가 오르면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은 인건비가 늘어나 아우성을 지르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은 수보회의를 빌어 공약에서 멀어지게 됐다며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의결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상황,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어렵게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작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두 자릿수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줬다"며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청와대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인상률을 한 자릿수로 생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집권 첫 해였던 지난해 당시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년보다 16.4%로 대폭 인상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곳곳에서 속도조절론이 제기돼 사실상 또다시 같은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판단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들의 강력한 반대와 불참속에서도 공익위원과 노동자위원들만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두 자릿수 인상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기계적인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노사정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승호 기자

"계엄령, 실행준비 됐었는지 확인 필요"

文 대통령, 軍 모든문건 제출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와 관련해 국내 모든 문건을 직접 챙겨보기로 했다.

지난 10일 인도 국빈방문 중 이 사안에 대한 독립 수사 특별지시를 내린 지 6일만에 관련 모든 문서를 자신에게 제출하라고 강력 지시하면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즉시 대통령에게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국가안보실을 통해 국방부로 전달됐다.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오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기무사·육군본부·수도방위사령부·특전사 등과 그 예하 부대"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제출된 문건은 관련된 수석실에서 검토할 예정"이라며 "민정수석실이 법률 검토를, 안보실과 정무수석실은 부대운영 지휘 체계와 군 운용 등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